

당신만의 한가위



그들에겐 寒가위



“아이들 간식 공간에 거미줄이 생긴 지 오래됐어요. 명절 때 받은 간식으로 이듬해 명절까지 보내던 시절이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네요.”

광주 A아동보육시설 관계자의 한탄 섞인 말이다. 2~3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명절 기부금과 후원 물품이 지난해부터 사실상 아예 끊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도 명절이면 으레 과자·과일 등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기억이 옛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8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이 눈에 띄게 줄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이들은 어느 해보다 쓸쓸한 한(寒)가위를 맞이하게 됐다.

아동보육시설인 광주 A보육원은 올해 설 명절에 비해 개인 기부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 고심하고 있다.

1일 현재까지 개인 후원금은 0원. 올 초 설

복지시설 명절 기부금·후원

지난해부터 사실상 끊겨

광주 구청 기탁후원금 줄어

노인요양원도 쓸쓸한 추석

올 후원 아예 기대않기로

기부문화 바뀐 것도 영향

연휴 해외여행은 되레 급증

은 지난해 추석 때보다 3분의 1 가량 준 후원금을 받았지만 갈수록 개인 후원금이 줄고 있다는 게 광주 A보육원 측의 설명이다.

노인보호시설인 광주 B요양원은 올해 개인 후원을 아예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 가정도 풍족한 명절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데,

시설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는 생각에서다.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매년 보내준 라면·과일 등 후원 물품을 빼면 개인 후원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B요양원 측의 설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개인 기부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북구에 기탁된 지정후원금(물품 현금 환산기준)은 1850만원,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0만 원 적은 금액이다. 동구는 이번 추석 지정기탁물품이 2300만 원인데, 지난 설 때만 2480만 원이었다. 서구와 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추석엔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왔지만 올 추석 명절엔 이날 현재까지 6000만원 안팎의 물품만 들어왔다. 남구 복지담당 공무원은 “추석 명절까지는 4~5일 남았고 주민센터별로 정확히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예년 명절에 비해 이번 추석은 기부 금액이나 물품이 확연히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 기부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해가 거듭 될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개인 후원 고갈 현상은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데다 기부금을 받는 곳이 상설화·다제널화되면서 기부문화가 바꼈기 때문이라는 게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 쪽으로 기부문화가 바뀌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적인 후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6~7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국제선 항공편 예약률이 80%에 달해 계층간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전양자씨 15일 첫 재판

검찰이 지난 6월 숨진 유병언 전 세 모그룹 회장이 도피 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몽블랑 만년필 등 비교적 고가의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검찰은 지금까지 유씨의 가방 총 10개를 확보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현상 2차장검사)은 1일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경기도 안성의 한 기독교복음집례회(이명 구원파) 신도 자택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3개 가방 중에는 1번 파지가 붙었던 것으로 추정된 가방도 포함됐다. 이 가방들은 유씨가 도피 생활을 하기 전 ‘신임파’ 신명희(64·여)씨가 구원파 신도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린트 전양자(72·여·본명 김정숙)씨가 다음 주 첫 재판을 받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선대, 표절 판정 잘못

교수 임용 진행해야”

조선대가 논문 표절·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된 교수의 임용을 보류한 결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교수 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김모(45)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교수 임용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조선대는 학교측의 ‘전임교원 공채 4단계 전형 및 특별채용 합격자 발표’에 따라 김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A연구소가 표절 또는 중복게재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교 논문은 원본과 달리 변형된 것이어서 판정 결과를 믿기 어렵고 표절 여부를 의뢰받은 모든 학회, 기관, 교수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교장·교사·배움터지킴이가 성추행”

전남 특성화고 여학생 2명이 신고

전남지역 한 특성화고교에서 교장·교사와 배움터지킴이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가 나섰다. 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 교사들의 과도한 처벌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이 학교의 교장, 교사, 배움터지킴이 등 3명으로부터 3~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올해 1학기 초부터 교장과 기숙사 사감인 교사, 배움터지킴이가 기숙사 등 학내에서 손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일부는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

을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청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학교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해당 교직원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과도한 처벌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단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해임하는 한편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학교의 교감도 병가 중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한 상태”라며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함부로 못한다

교육부 장관 동의 받도록 법 개정하기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혐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동의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려는 법원에서의 ‘각하’에, 부동의는 ‘기각’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반려 사유를 개선해 교

육부에 재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예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 연장하면서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누가 힘이 더 세 졌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은 1일 북구 두암동 삼정초등학교(교장 김숙희) 학생들이 팔씨름을 하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센터 직원들도 승소…광주시 공기업 통상임금 몸살

“지리한 소송에 갈등 불씨…합리적 점점 찾아야” 여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광주시 산하 공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앞서,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전·현직 직원 426명이 낸 통상 임금 소송에서 패소, 항소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합하는 판단이 잇따르는 점에서 지리한 소송전과 갈등을 막기 위한 합리적 점점을 찾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서영기 판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모(42)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이 낸 통상 임금 소송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6900만원 상당을 지급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 직원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여·장기근속·특수업무수당, 급식보조비 및 교통비, 맞춤형복지비 등 7500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수당을 비롯, 장기근속·특수업무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금껏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 전시간변전수당, 기술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통상임금’임을 주장했던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의 통상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지켜라)’이라는 내용이나 방편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원칙)에 위반된다는 김대중센터의 주장과 관련, “센터는 김가상 각비를 제외하고 지난해에만 7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 상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광주도시공사·환경공단 등도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데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7월 전·현직 직원들이 낸 13억7900만원 상당의 통상 임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엔날레 시민 참여작품 도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설치된 2014 광주비엔날레 시민 참여작품 중 일부가 도난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 새벽 2시 사이에 광주시 동구 산수동 광주지법 인근 도로 가로수에 걸싸 둔 광주시민상주모임의 손뜨개 작품(가로 20cm·세로 20cm) 26점 중 6점이 사라졌다는 것.

○…광주시민상주모임은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시작품을 설치했는데,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 중.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아파트]					
2014타경 2646	2	북구 월동로 88, 102동 6층 603호 [라희동] 아파트, 글로빌아파트] 84.90㎡	전	170,000,000 170,000,000	
2014타경 7429	1	서구 월동로44로228번길 5, 103동 20층 2008호 [내방동, 해태아파트] 59.91㎡	전	125,000,000 125,000,000	
2014타경 12490	1	나주시 송월북 660 송월주공아파트 111동 6층 606호 49.96㎡	전	74,000,000 74,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4타경 11336	1	북구 운암동 809-5 172㎡ 대 부속건물 변소1㎡ 제치와 창고 등 91.6㎡	대 단독주택	151,597,420 151,597,420	일괄매각, 제치와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1179	1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2738 4528㎡	답	81,504,000 81,5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2646	3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339-6 119㎡	전	785,400 785,4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9418	1	북구 덕의동 13 1583㎡	전	37,992,000 37,9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14타경 10463	1	화순군 이서면 안산리 69-3 6991㎡ [문묘리 하여법정지상권점령여지있음]	전	58,025,300 58,025,3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69-19 1323㎡	답	17,199,000 17,199,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10579	1	정성군 동화면 남평리 446-3 1431㎡ [현황 담기타, 비닐하우스, 농지취득자격증명]	답	22,896,000 22,896,000	타인소유매각외제
2014타경 11640	1	화순군 도암면 문월리 353 1706㎡ [문묘리 하여법정지상권점령여지있음]	전	15,183,400 15,183,4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12070	1	정성군 삼계면 사창리 54 506㎡	전	19,228,000 19,228,000	토지일부소로2류
2014타경 13370	1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00-3 957㎡ 동소 100-8 51㎡ [토지점도구역지속됨][물건번호1:공유자광곡지분2분의1지분전부, 공유자유전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답	7,017,750 7,017,750	일괄매각, 농지취득
			답	1,100,000	목책1일부점도구역지속

[기타]

2014타경 10173	1	북구 서강로 104-3, 1동 2층 220호 [운암동, 운암프라자] 60.48㎡	기타	73,000,000 73,000,000	
--------------	---	--	----	--------------------------	--

● 공고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매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신인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경우에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상인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9. 17.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9. 24.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입양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액,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불참의 자기유류금 또는 현금

를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득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회 이상에 걸쳐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방의 투입이 종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최고기대수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으로 정하고, 동가격인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우선시 후 입찰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최고기대수신인과 조인취득자격증명 제출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까지 확정된 대금지급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까지 확정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3월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면, 비문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유류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기입유류의 말소처리를 위해서는 통상매와 지상권처리를 납부한 후 통상매영수증일시 및 통상매영수증일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임대차보증금을 기한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방금의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서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에 내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받거나 입찰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한 물건명에 매각기일에 판매대상인 물건이 취소,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진행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에 의거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행정청법정]에

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에 등록하고 매각기일 공고나 다른 법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따로 재판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가, 산입이탈, 공고, 대금지급신청인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내오셔서 제정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선주대